

# 전남도, '초고령시대' 어르신 복지 1조6000억 투입

###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확대 노인일자리 5만300개로 늘려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 추진

전남도는 올해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 개인별 욕구 중심의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1560억원 증액된 1조61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

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체계를 강화하는데 쓸 계획이다. 우선 기초연금 1인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 기초연금을 수급중인 도내 어르신 98%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2만5000원에서 30만원, 부부가구는 3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4만7000개에서 올해 3300개 늘린 5만300개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은빛장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

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 돌봄의 기초 역할을 수행해온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홀로사는 노인의 비대면 상시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도내 독거노인 등 2만7000세대를 대상으로 응급·건강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및 IoT(사물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지킴이단 2447명의 활동을 강화해 어르신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개인별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

해 5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박환주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감은 클 것이다"며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23.5%(전국 평균 16.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편입돼 전남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마트·시장 유통 식품 1만건 중 19건 유해성 기준 초과

지난해 광주에서 유통된 식품 1만건 가운데 19건꼴로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된 식품 6833건을 검사한 결과 13건(0.19%)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별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과자 기름 성분 불패도, 새싹보리 분말과 고춧가루의 금속성 이물, 차류·두부·소스류·수산물 가공품의 세균수,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 시민의 관심이 많은 방사능 정밀 검사에서는 유통 식품 288건, 한빛원전과 가까운 광산구 삼거동 일대 농산물 48건, 학교급식 재료 50건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실국장 회의 주제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1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용섭 광주시장, 일선 행정에도 AI정책 시행

### 1기관 1 인공지능정책 개발·시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만들기에서 나서는 광주시가 일선 행정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산·하기관별로 1기관 1 AI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AI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곳이라면 행정도 산업사회 대면 행정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민 편의를 확충하고 예산을 줄여 업무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분청 실·국과 산하기관은 1기관 1 AI 서비스(정책)를 개발해서 시행하는 내용을 공동 성과창출 목표로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 시장은 또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계"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망라한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일자리 등 모든 정보가 교류되는 양방향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은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예술인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순천시, 30년간 특정업체 4곳에 355억 규모 생활쓰레기 용역 맡겨

### 전남도 "법령 근거 없는 수의계약" 조경공사 입찰 과도하게 참여 제한

순천시가 지난 30년간 모두 355억원 규모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특정 업체 4곳과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조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 전남지역 기업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전남도가 발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

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들 3개 업체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 4곳이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35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또한 최근 3년간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의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들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업에 해당해 전문건설업 자격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순천시가 입찰 참가 지역을 종합건설업(본점 소재지 순천)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전남 도내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최저'

### 15µg/m³로 관측 이래 최저치

전남도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전국 472개, 전남 43개)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µg/m³였으며, 전라남도는 15µg/m³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 전남지역 농도 19µg/m³ 대비 21.1% 감소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또 지난해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36µg/m³ 이상)'으로 확인된 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7일을 기록, 2019년 24일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어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특히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µg/m³)을 달성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전남의 11개 시·군이 포함된 우수한 성과도 됐다. 도내 지역별 완도군이 12µg/m³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여수시(13µg/m³), 광양시(14µg/m³) 등 순이다.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비롯 중국의 대기질 우량일수(40일) 지속, 코로나19 영향 및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전남도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2472대를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1만1000대를 설치했으며, 대기측정망 43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10개소와 함께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등 생활 밀착형 도시숲 53개소도 조성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